

광주교도소 이전 2014년말로 또 연기

진입로 개설 이견 지연

광주시 “올 80억 확보”

부지 활용안 용역 착수

광주교도소 이전 시기가 2014년 6월에서 2014년 12월 말로 또다시 늦춰졌다. 하지만, 이전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민주·평화·인권센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북구 각화동에 있는 광주교도소를 삼각동(부지 면적 28만7512㎡)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진입로 개설 문제로 광주시와 이견을 보여 5개월간 공사를 중지한 뒤 현재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교도소 이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법무부는 2014년 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애초 2013년까지 교도소를 이전하기로 했으나 토지매입이 늦어짐에 따라 2014년 6월경으로 이전 시기를 한차례 늦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교도소 진입로에 해당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며 “광주시가 진입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진입로 개설문제로 광주교도소 이전 시기가 2014년 6월에서 2014년 12월 말로 또다시 늦춰졌지만, 현 광주교도소 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민주·평화·인권센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광주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 전경.

는 약속을 해 2014년 말 이전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북부순환도로 전체 6.7km 구간 중 교도소 진입로에 해당하는 900m 구간을 일단 개설하기로 하고 개설 비용 50억 원을 법무부에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올해 국비와 시비 80억원을 확보한 만큼 진입로 개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현재의 광주교도소 부지(10만8423㎡)에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올해 부지활용 문제에

대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각화동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고, 올해부터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각화동 교도소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0억 원이다.

따라서 무상대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건축비만 500억 원 추정) 하려면 막대한 시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시는 정부로부터 부지 무상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현재의 광주교도소가 5·18 사적 제22호 지정돼

보존가치가 높다는 점을 법무부에 건의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비 투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도소 부지 무상 대여가 최고인 만큼 법무부와 정부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올해 부지활용에 대한 용역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부단체장 ‘무원칙 인사’ 논란

뇌물수수 입건자 “구속 안됐다” 유임

비리 연대책임제 한다더니 유명무실

전남도가 3일 단행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때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면서 ‘말 따로 행동따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3일 준국장 및 부단체장 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근무 경력과 종합 행정 추진능력’등을 감안, ‘적재적

소’(適材適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원칙과 실재가 따로 노는 일관성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남도는 산하기관인 전남 문화산업진흥원의 직원 인사 과정에서 직원 특별채용 대가로 그림과 명품저가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군수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구속되지 않았고 검찰 기소 여부

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사유지만 ‘원칙과 실재가 따로 노는 일관성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장을 검찰 기소나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했던 ‘방침’과는 사뭇 다르다. 고위 간부 비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했음에도 ‘윤정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임 모 부군수는 직전 부서 근무 당시 산하사업소 직원이 연구비를 빼돌려 유혹비와 부서 회식비로 쓴 혐의로 구속되자, 상급자 연대책임제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연대책임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부군수로 자리를 옮기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인사관자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그동안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로 사법기관에 구속될 경우 담당 부서 직속 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차상급자의 경우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해당 부서 상급자들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조해 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시했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부문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다른 부군수는 해당 단체장이 특정 분야 전문가를 요청한데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 인구 감소 지난해 4000명…역대 최저

道 “기업 유치 등 효과”

한때 1년에 4만명까지 줄었던 전남지역 인구감소 폭이 지난해에는 4000명선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191만4339명으로 전년 말(191만8485명)에 비해 4146명

이 감소했다. 매년 말에는 4만명씩 줄던 도내 인구는 2009년 6000명대로 감소폭이 줄었으며 지난해 4000명대로 최저 감소폭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타 시·도로 나가는 진출 인구 수도 2003년 15만8000명에서 작년에는 10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또 2007년부터 5년 연속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연평

균 800여명 많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최근 4개월 동안은 인구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행복마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둔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시장·지사 연봉 1억 넘었다…올 공무원 보수 3.5% ↑

올해 공무원 보수가 3.5% 오른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 업무를 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수당도 인상된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원에서 4.1% 오른 1억8642만원이 된다. 여기에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

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1905만원에서 2억2638만원으로 3.3% 오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452만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한 총 보수는 1억6672만원이 된다.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이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연봉이 1억321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서었다.

군인은 이등병이 월 8만1500원, 일

등병이 월 8만8200원, 병장이 월 10만8000원을 받게 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합정근무 수당도 월 9만2000원~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높아진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을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보충역 키 하한선 204cm

올해부터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검사 대상자 키 기준이 기존 196cm에서 204cm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를 해야한다.

국방부는 이같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에 고쳤다.

여권사진 구형서 무료촬영

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을 따로 찍어가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여권을 신청할 때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여권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외교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주 부시장 고성혁·F1지원담당관 최종선

전남도 부단체장 인사 단행

전남도는 3일 부단체장, 준국장급 등 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4일자인 이번 인사에서 나주부시장에는 고성혁 인력관리과장이, 구례 부군수에는 김재홍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이, 장흥 부군수에는 황기연 경제통상과장이 전보됐다.

또 강진부군수에는 박군조 식품위

생과장을, 함평부군수에는 장석홍 행정과장을, 진도부군수에는 신우철 해양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또 교육에서 복귀한 최종선 전남무안부군수는 신설된 F1대회지원단 당장에 임명됐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에는 설동진 지역계획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의회사무처 입법지원관에는 노두근 강진군수가 임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 칠순/팔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 종친회
- 기업체 각종행사

예의 파티외식산업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경매특자

- ◆ 실전 경매 개인지도 받으실 분
- ◆ 경매비용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주1회 3개월 완성, 강의로 330만원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포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새~80%+α (6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80% (60%)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용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주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평과의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 (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8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병의.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는 분
- ◆ 불면증 / 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향상된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